대학 본고사형 출제 제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을 끝낸 대학을 대상으로 논술 및 구술면접을 사실상의 본고사로 치렀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계속 금지하며 위반 시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조치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9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이번 1학기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현행 고등교육법상의 본고사 금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대입 사후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적성검사나 구술면접을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영어나 수학 등 특정 과목 문제를 내준 뒤 답을 작성토록 하는 행위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2~3년 사이 전공적성검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지필고사화 혐의가 짙은 A대 등 서울 소재 3, 4개 대학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의 지필고사 실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강력한 행 ·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학년도 11월 2학기 수시모집에서 본고사 형태의 지필고사를 본 서울 H대를 적발, 예산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로스쿨 · 사법시험 5년간 병행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가 2008년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9월 7일 로스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선발 제도 개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개위 전체위원(21명) 가운데 80% 이상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이번 개선안이 사개위의 최종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전달하면,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한 응시생들이 변호사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000명)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사개위는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률이 80%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전체 입학 정원은 1,200명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6학기(3년)제로 운영되며,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키로 했다. 신입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어학능력 및 적성시험의 방법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로스쿨 방안 중요 내용

도입시기	2008년
인가 주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설치 기준	전임교수 최소 20인 이상, 전임 교수 중 20% 이상은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 실무경험 보유
전체 입학 정원	약 1,200명
입학 자격	학사학위 소지자
현행 사법시험	로스쿨 졸업자 배출 후 5년간 변호사자격시험과 병행 실시, 이후 폐지

사개위는 로스쿨을 어느 대학에 인가할지에 대한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주기로 했다. 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인가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과 관련, ▶전

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 저소득층 자녀들이 법조인이 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대상 '2004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평가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7일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04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서울대, 한양대, 인천대 등 특성화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27개 대학에 6백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대학 전체 72개교 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62개교 중 평가결과에 따라, 대규모대학은 '융합기술기반 핵심소재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제를 제출한 한양대 등 11개교가,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 교육시스템 구축' 과제를 제출한 항공대 등 16개교가 선정됐다.

선정 대학에는 평가결과와 학교규모 등을 감안해 대학별로 대규모 대학은 41억 5천만 원~27억 2천만 원, 중·소규모 대학은 18억 4천만 원~8억 9천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단위 : 억 원)

구분	대학명	지원예정액
대규모 대학	사울대	41.95
	한양대	38.9
	이화여대	36.5
	중앙대	36.4
	성균관대	35.8
	고려대	34.3
	연세대	32.0
	인하대	29.8
	홍익대	29.8
	명지대	27.8
	국민대	27.2
소계	11개교	37.0
중·소 규모 대학	인천대	18.4
	서울시립대	16.9
	세종대	16.5
	숙명여대	16.1
	서강대	15.8
	대진대	15.6
	성신여대	15.4
	경인교대	14.5
	한국항공대	14.5
	아주대	13.8
	한국산업기술대	13.5
	상명대	13.2
	포천중문의대	12.9
	강남대	12.1
	삼육대	11.9
	한국성서대	11.9
소계	16개교	23.0
합계	27개교	60.0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재정지원 사업을 지방대는 누리(NURI)사업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은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했는데, 이번 사업은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대학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 수 기준(1만명)에 따라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으로 나눠 평가했다.

올해부터 교원확보율 50% 이상, 산학협력단 설치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청서를 받지 않았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정대학은 대폭 지원하는 반면 탈락 대학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확보율의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10%)하고, 학생정원 감축을 평가항목으로 추가(10%)해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했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크게 특성화 추진 영역(65점)과 정책 유도 영역(35점)으로 구분하고, 특성화 추진 영역은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책 유도 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 각 담당부서에서 평가했다.

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는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2개 소위원회별로 서면평가 및 질의, 응답평가를 실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대학 소속 평가위원은 중·소규모 대학을, 중·소규모 대학 소속 위원은 대규모 대학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 산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단 선정

과학기술부는 최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지원대상 사업단 2개, 2005년도 지원대상 사업단 1개 등 총 3개의 지방연구중심대학사업단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따라 부산대의 '차세대물류 IT기술 연구사업단', 전북대의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이 올해부터, 충북대의 '충북 BIT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단'은 2005년부터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으로 각각 선정됐다.

지방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초기에는 권역내 3~4개의 우수 이공계 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지방연구중심대학사업단 형태)을 선정, 지역 미래특화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연구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향후 사업단에 참여했던 대학 중 해당지역 특화분야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어발' 대학은 버리고 '한우물' 대학만 키운다

'군살 빼고 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학생 자원 감소로 대학들의 학생 모집난이 심해지면서 교육 내용을 특성화하는 등 대학가에 변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까지 대입 모집정원을 9만 5천명이나 줄이고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국립 21명, 사립 24명까지 줄이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과 교육 여건 확충에 박차를 가하면서 두드러진 모습이다.

대진대는 중국시장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 인근의 쑤저우대와 하얼빈사범대에 전용 기숙사(수용 규모 700~1,400명)와 강의실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1, 2학년생을 1,000명씩 보내기로 했다. 한양대는 융합기술기반 핵심소재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학과 중심에서 학제간 교육,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교육, 교육과정 자율설계 등 교육 과정을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교수 1인당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이 7.25편이 나올 정도로 연구력이 성장했다. 고려대는 '보수 대학' 이미지 탈피와 국제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등의 유명 대학에 매년 800명씩의 학생들을 보내는 등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경제자유특구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항공대는 국가전략 6대 기술 분야인 항공우주산업을 특성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교육을 연계한 산학협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7일 수도권 72개 대학 중 특성화지원 사업을 신청한 62개대에 대한 심사를 벌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대진대, 인천대, 한국항공대 등 27개 대학을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의 사업 내용과 학교 규모 등을 감안, 학생 수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과 그 이하의 중소규모 대학으로 나눠 27억 2천만~41억 5천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05학년도 입시부터 모집정원을 서울대 625명, 성균관대 100명, 이화여대 50명 등 12개대에서 909명을 줄이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대학 재정 지원을 학생 수에 따라 대학별로 골고루 나눠주는 '일반지원'과 사업특성을 심사해 주는 '선별지원'으로 구분해 집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성화사업

과 실적을 연계해 우수 대학에만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지원받던 대학들은 자존심을 건 특성화 경쟁을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조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이제는 학생이 대학을 고르는 시대"라며 "대학들이 과감한 구조조정과 유사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특성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신입생 지역 · 계층등 공개해야

내년부터 대학들은 신입생 가운데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출신 등 지역이나 계층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또 수시 전형에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해 왔던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 등 기본적인 전형 요소별 평가 기준도 밝혀야 한다.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총리는 "대학이 내년부터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농어촌 출신 혹은 일정 소득 이하 학생의 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해야 하는 다양성 지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재정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신입생을 다양하게 뽑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이냐는 물음에 "공시가 시작되면 그 결과에 따른 행정 · 재정 지원 연계도 점차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수시 등 대입전형에서) 각 대학들이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기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상당수 사립대들은 올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석차 백분위의 기본점수 등 반영 방식을 비공개로 해서 내신 실질 반영률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안 부총리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평준화 체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중장기 과제로 돌려진 교사별 평가는 기본적 교육 여건, 교사 연수와 학부모 홍보 등 3대 전제가 충족된 뒤에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직단체의 대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에 대해선 "초빙과 공모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 평정과 별도로 교장 승진 대상자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학과 사라진다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이었던 야간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최근의 경제난으로 대학별로 '야간대'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야간학과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

국민대는 2004년 야간학과 모집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작년 392명에서 230명 규모로 조정한 국민대는 영문학과(30명), 국사학과(20명), 법학부(40명), 비즈니스IT학부(10명), 신소재공학부(42명), 수학과(20명)에서 총 162명을 줄였다.

전문대인 한림성심대학도 올해 야간학과 모집정원을 작년 672명에서 408명으로 대폭 줄였다. 야간학과인 관광영어(40명)와 관광일어통역(40명)을 관광커뮤니케이션(30명)으로 통합했고 바이오식품과(40명), 컴퓨터정보과(40명), 전자정보통신과(40명), 인터넷정보과(40명)에서 뽑던 인원을 컴퓨터정보기술과로 통합해 모집정원을 30명으로 대폭 감축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대, 청주대 등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38,811명에 달했던 4년

제 대학의 야간학과 모집정원은 2003년 27,928명, 2004년 21,777명으로 3년 사이에 무려 1만5천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교육예산 5.2% 늘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6조 5,823억 원)에 비해 1조 3,837억 원(5.2%) 늘어난 27조 9,6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내년 교육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 및 초·중등교육 투자 확대. 고등부문이 1조 9,175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5.5%나 늘었고, 초·중등교육도 24조 1,941억 원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했다.

고등부문은 국립대 통합, 국·사립대 학부 통합 등 대학구조개혁에 책정된 1,000억 원이 눈길을 끈다. 정원역전현상에 따른 입학자원감소 등 대학의 급격한 여건변화를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도 2,5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방대와 별도로 수도권대에는 대학특성화 자금으로 600억 원이 지원된다.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두뇌한국(BK)21 사업에는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의·치의대의 전문대학원 전환을 돕기 위해 65억 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도 1,006억 원이 편성됐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방송(EBS) 인터넷 강의 수능 프로그램 제작에 192억 원,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로 학습문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e-러닝 지원체제 구축에 64억 원이 각각 주어진다.

계층·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5세 아동 8만1천명과 3·4세 아동 3만2천명에게 각각 642억 원, 164억 원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준다. 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를 신설, 1만7천여 명의 아동에게 31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장애유아 1,500명에게는 월 20만원의 무상교육비를 지급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는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신장키로 했다.

학자금도 '모기지론' 도입 추진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이르면 내년 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보증기금'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만기는 10~20년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3,600만원, 금리는 연 6.5~7%선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취급하는 현행 학자금 대출 상품보다 대출기간이 길고 한도도 높아 조건이 좋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부도율이 높아 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적지 않다. 기금재원 조성과 관계부처간 조율도 과제다. 10월 7일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향의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얼마전 "미국식 대여장학금 제도를 본뜬 학자금대출을 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 동안의 물밑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9월에는 국회에서 재경부·교육인적자원부·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학자금대출(금리 8.5%)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자의 절반(4.5%)을 지원해주는 상품

이 있다. 대출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8,700억 원. 이자부담이 적은 대신 1인당 대출한도(4년간 2000만원)가 낮아 별도의 고금리 대출을 병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지만 금리(연 15%)가 너무 비싸다. 시중은행들은 "수익성은 없으면서 떼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행 상품 외에는 자체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사들여 조기 현금화(유동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용 원리는 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과 똑같다. 교육인적자원부 상품의 수혜자가 전체 대학생의 15%인 34만 명에 불과한 것도 정부가 신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다.

현행 학자금대출의 부도율은 평균 10%선. 자칫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정부가 '학자금대출 보증기금'이라는 별도 기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모기지론과 달리 학자금대출은 대출규모가 적어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재경부와 공사측의 설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올해 학자금대출 예산 912억 원을 종자돈으로 삼아 우선 1,000억 원선에서 출범한 뒤 재원의 10~20배, 즉 1조~2조 원까지 보증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상품보다 1.5~2%포인트 싸다.

문제는 이자 지원 지속 여부. 지금은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어 학생들의 실제 이자부담은 연 4%에 불과하다. 이자 지원을 중단하면 전체 대출금리가 싸지더라도 실제 부담은 올라가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초기에는 이자 지원 상품과 이자 지원 없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계곤란 대학생 연간 500만 원씩 지원

내년부터 가계곤란 대학생 3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씩 정부 장학금이 지원되고 이자율이 2%인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가 신설된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습부진 학생 지도, 특기적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현재 8곳에서 2008년까지 4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0월 19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을 현재 전체의 약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약 10%인 17만5천명으로 늘리고 급식비 지원대상도 현재 초중고생의 약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약 10%인 77만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확대, 대상지역을 현재 서울과 부산 일부에서 내년 15곳, 2008년 40곳까지 늘려 1곳당 연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갈수록 학생이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군마다 1개 고교를 우수고로 선정, 장학금 지원, 기숙사 시설 완비, 우수교사 배정 등을 통해 도시 학교 수준의 명문고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 학교의 부족한 시설, 인력을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접 학교 2~3곳을 하나로 묶어 '학교군(群)'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에 심장장애, 신

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특수교육 지원 범위를 급식비와 학교 운영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일종의 정규학교인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고과정 통합학교를 2006년 개교하기로 했다.

교수재임용 '심의' 의무화

앞으로 대학교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재임용 심의는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 학생 지도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8일 기간제 및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교수가 재임용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임용 거부 사유와 사전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임용 여부의 심의는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학생 지도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 또 심의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또 교수 임용기간이 끝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은 재임용 신청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75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수 439명(대학 327명과 전문대 112명)의 탈락 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사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보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심사 신청을 받은 뒤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2008대입안 확정…수능 등급만 표가내신 위주로 선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 점수가 폐지되고 등급(1~9등급)만 기재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평어(수우미양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과목별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주고 석차도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비중을 낮추고 학생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10월 28일 확정 발표했다.

새 입시제도는 8월 26일 시안 발표 이후 수능과 학생부의 변별력 문제와 고교간 학력차 반영 논란이 겹쳐 6차례 연기된 끝에 확정됐지만 대학들은 수능과 학생부 9등급 성적만으로는 학생 선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 입시제도는 9등급제인 현행 수능의 1등급 비율을 상위 4%로 유지하되,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면 등급 수를 줄이거나 1등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

기로 했다.

2008학년도 이후 수능은 통합교과 출제방식인 현재와는 달리 고교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출제위원회에 교사를 50%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2008학년도에 탐구영역의 문항공모제를 거쳐 2010학년도부터 문제은행식으로 확대하고, 수능을 연간 2회 실시하거나 이틀에 나눠 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06년부터 교사의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기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고, 2010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교사별로 문제를 내고 평가하는 교사별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공직추천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인재들이 대학총장의 추천과 간이 평가를 거쳐 공직에 임용되는 길이 열린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월 28일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방 대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턴채용제(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부터 학교성적 상위 3~5% 이내, 영어 토익 775점(토플 560점) 이상인 학생을 추천받아 공직 적격성 평가(PSAT)와 구술시험을 통해 인턴 대상을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된 사람은 3년 정도 공직에서 견습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6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어 공무원 충원 방식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별도의 수험 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이 공무원이 될 수 있어 대학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앙인사위는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인원이 골고루 배정되도록 특정 광역단체 출신(서울시 포함)의 대학생들이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양성 평등정신을 살려 한쪽 성의 합격자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182곳(분교 포함)에서 인문·이공계 각 2~3명 정도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 가운데에서 65명 정도를 선발한 후 최종 면접에서 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을 합격시킬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연내에 세부적인 채용 지침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7월쯤 각 대학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열린우리당은 10월 13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교원임면권은 재단이사회에 주되 이사회의 3분의1 이상을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사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4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뒤에 복직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은 당초 친족관계 이사의 상한선을 5분의1로 정하고, 비리 임직원의 경우 10년 후 복직을 주장했으나 정부안을 수용, 개정안을 완화했다. 당정은 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 교원 임면을 제청하는 등 인사 과정을 투명화하기로 했으며, 이사회의 인원은 현행 7명에서 9~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교수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게 될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감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학 대체 법안 성안 '초 읽기'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맞서 사학법인이 학교 폐쇄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잇따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사학 대체 법안 확정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11월 3일 "한나라당 대체 법안의 기본 방향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강화하되, 사학의 자율권은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내부 이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위가 검토하고 있는 초안은 예·결산 공시와 감사 기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주호의원 안, 사학을 설립별로 유형화한 이군현 의원안, 사학 자율과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등을 강조한 김영숙 의원안 등이 바탕이 되고 있으나, 이의원이 마련한 초안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구성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산운영과 예·결산, 회계, 감사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성실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공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공시규정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부 및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2인 가운데 1명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감사 가운데 1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의 유급 감사를 두도록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특히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법인이 강력히 반발하며 현 제도 유지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굳이 법안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 대체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정기 국회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이 종교재단들과는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자체 법안을 제출해 굵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10월 28일과 11월 2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열린 우리당이 지난달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친족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낸데 대해 일부 조항의 위헌 소지는 물론 사학의 자율성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키로 했었다(관련기사 79~91p). 대학교육